

북한의 사법제도 고찰*

- 변화된 북한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제도-

이 은 영
(법무법인 송인 변호사)

요 약 문

본 논문은 종래 국내 문헌에서 언급된 북한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제도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후 9차에 걸친 북한 민사소송법 개정 및 10차에 걸친 북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북한 헌법, 재판소구성법 등의 변천 내용을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변화된 현재 북한의 소송제도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북한 민사소송의 경우, 현재는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해왔고,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민사소송에 검사가 관여하는 것은 여전한 특징이나 이제는 감시가 아닌 ‘참가’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일반대중의 경우 직접 재판소의 구성원이 되거나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현지조사, 현장검증에 있어서의 참여 및 소송심리에 있어서의 의견진술의 기회는 갖지 못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 민사소송에 있어 인민재판적 성격은 거의 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의 관할에 있어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 계속중인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이송할 수 있음은 여전하나, 2016년 개정으로 각 재판소 관할을 별도로 규정하고 특별재판소 관할을 다수 신설하였다.

북한 형사소송의 경우, 현재는 프롤레타리아계급 및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는 북한 형사소송법의 보호적 성격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여전히 인민들이 현지료해, 현장검증, 재판심리 등 형사소송 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여전히 인민재판적 성격이 많이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개정을 통해 강제처분에 영장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권한이 검사에게 있고 법원의 견제는 받을 수 없어서 진정한 의미의 영장주의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형사소송의 관

* 이 논문은 이은영, “북한의 사법제도 개관-북한의 변호사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2018. 11.)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보완한 것이다.

할은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고 특히 최고재판소가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성택 재판의 경우처럼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은 1992년 개정으로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전문증거 배제법칙은 여전히 채택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민사소송 제도는 종래 지적된 인민재판적 성격이 거의 사라지고 당사 자처분권과 변론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해온 반면, 북한의 형사소송 제도는 유의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민재판적 요소가 상당수 남아 있고, 진정한 영장주의 제도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사형까지 집행될 수 있는 관할 제도 등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소송제도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의 사법제도, 북한의 민사소송, 북한의 형사소송

【目次】

I. 북한의 사법기관

1. 검찰소와 재판소
2. 북한의 판사와 검사의 자격

II. 북한 민사소송 제도의 특징

1. 종래 북한의 민사소송 제도
2. 북한 민사소송 제도의 변화
3. 2016년 북한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4. 현재 북한 민사소송 제도의 특징

III. 북한 형사소송 제도의 특징

1. 종래 북한의 형사소송 제도
2. 북한 형사소송 제도의 변화
3. 현재 북한 형사소송 제도의 특징

IV. 결어

I. 북한의 사법기관

1. 검찰소와 재판소

북한의 사법기관으로는 검찰소와 재판소가 있다. 북한 헌법은 검찰소를 재판소보다 먼저 규정하고 있다. 검찰소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구성된다(헌법 제153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하며(헌법 제

15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해야 한다(헌법 제157조).

북한의 검사제도는 수사 및 공소제기 측면에서는 우리와 유사하나, 이외에도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헌법 제156조, 검찰감시법 제1조)¹⁾. 실제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는 판사보다 검사의 권한이 강력하다고 진술한다.

[북한 헌법]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북한 검찰감시법]

제1조 검찰감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이다. 검찰감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급 검찰기관이 한다.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 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 구성된다(헌법 제159조). 특별재판소에는 군사, 철도, 군수 재판소가 있다(재판소구성법 제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할 수 있다(헌법 제163조). 판사, 인민참심원은 해당 지역 지방인민회의에서 선거 또는 소환하여 임면한다는 점에서(헌법 제140조 5호), 검사의 경우 중앙검찰소에서 임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

1) 송인호, 『통일법강의』, 법률출판사, 2015, 118쪽 참조.

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도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출된다(헌법 제161조).

북한 헌법은 판사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다만 재판소 구성법 제8조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 반면 재판의 독립성에 관하여는, 헌법에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66조). 또한,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64조).

[북한 헌법]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썬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

북한의 사법기관인 검찰소와 재판소는 모두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헌법 제158조, 제168조). 특기할 만한 것은, 두 기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기관들이 사명으로 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고 규정) 이외에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헌법 제18조에서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을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의무”로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북한에서 법이 국가활동(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으로 명시)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2) 송인호, 위의 책, 118~119쪽.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판사와 검사를 총칭하여 ‘사법검찰일군’으로 부르며 매년 ‘사법검찰일군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³⁾ 재판소에서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인민참심원’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도입된 것으로, 주로 정치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한다. 인민참심원은 각 기관·단체별 추천에 따라 선출되는데 실제로는 노동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⁴⁾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재판소구성법 제12조). 대부분의 재판에 있어 재판을 통해 관계 인민들에게 교훈 및 경고를 하기 위해 미리 관계자들을 방청인으로 강제 참가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⁵⁾

2. 북한의 판사, 검사의 자격⁶⁾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국민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재판소구성법 제6조).

실제 북한의 판사는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법학과 등에서 5년간의 정규법학 교육을 받고 재판소에서 실습생, 지도원, 재판서기, 집행원, 보조판사 등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던 자 중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검사나 국가중재기관의 중재원 중에서 선출되기도 한다. 초임 판사 연령은 빠르면 30세 중반 정도이며 판사의 평균연령은 40대 후반 내지 50대 초반 정도로서 검사보다는 나이가 다소 많다고 한다. 판사는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므로 순수한 농민이나 근로자출신이 판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판사의 위상은 중앙재판소 소장은 서열 60위 정도, 중앙검찰소 소장은 서열 63위 정도, 중앙재판소 판사, 중앙검찰소 검사는 노동당 국장급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북한 형법은 재판일군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노동

3) 송인호, 앞의 책, 119쪽.

4)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법원행정처, 2010, 450쪽.

5) 법원행정처, 『북한 사법제도 개관』, 법원행정처, 1996, 173쪽, 송인호, 앞의 책, 120쪽에서 재인용.

6) 법원행정처, 『북한 사법제도 개관』, 법원행정처, 1996, 149~162쪽, 같은 책, 503~517쪽, 송인호, 앞의 책, 120~121쪽에서 재인용. 내용 중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는 2016년 북한 헌법 개정으로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단련형에 처하도록(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 255조 부당판결, 판정죄).

검사는 판사와 달리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일반 대학 출신도 많으며 간부 재교육기관인 인민 경제대학 산업법률학부나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통신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II. 북한 민사소송 제도의 특징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중에 아직까지 판사, 검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고,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인민참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은 있었다. 앞으로 북한의 검찰업무 및 재판운영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헌법과 재판소구성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국내 논문 등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민사소송의 특징을 살펴본다.

북한은 197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채택(제정)하여, 1994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에 두 차례, 2015년, 2016년에 이르기까지 9차에 걸쳐 민사소송법을 수정보충(개정)하였다. 특히, 2016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화도 컸다. 한편, 북한 헌법도 2016년 개정되면서 최고재판소와 최고 검찰소의 명칭을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변경하였다.

1. 종래 북한의 민사소송 제도

국내 문헌(1992)에서 소개한 북한 민사소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북한 민사소송은 사회주의적 소송관에 입각하여 소송에서 본질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이익추구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앙집권적 통일성과 결부되어 재판소의 지도통제에 따라 철저한 직권탐지주의가 행해진다.

7) 이하의 내용은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1-민사관계법)』, 법무부, 1992, 473~486쪽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북한 민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배척한다. 당사자 외에 검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상소하지 아니하여도 검사의 항의로 상소할 수 있다. 소의 제기가 당 사법정책과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재판소가 소장의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의 포기나 화해의 경우에도 법원이 사건기각판정 또는 화해판정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집행 역시 검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둘째, 북한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배척한다. 법원이 변론을 지휘하면서 증거제출을 지도하고 직접 사건해결에 필요한 소송자료를 수집·채택할 수도 있다. 변호사 역시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노동자계급 전체의 입장에서 전인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셋째, 검사가 민사소송 절차에도 깊이 관여한다. 검사가 법관의 재판을 감시하기 때문에 법관이나 사법권의 독립은 생각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속중인 소송에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참가할 수도 있다.

넷째, 북한의 민사소송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 이외에 일반 대중도 관여할 수 있다. 주체사상과 당성에 충실한 근로자이면 누구나 판사나 인민참심원이 될 수 있고 이들은 선임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법원은 현지료해·현장검증 등 소송활동에 일반 대중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을 교양·통제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 민사소송은 제1심관할 분배에 뚜렷한 기준이 없다. 북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응 제1심관할은 시(구역)·군 인민재판소가 갖는 것으로 보이나, 도재판소와 중앙재판소도 필요한 경우 제1심관할을 가질 수 있고, 사건을 가져가거나 다른 재판소로 이송할 수도 있다.

2. 북한 민사소송 제도의 변화

그러나, 북한 민사소송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1994년부터 2016년까지 9차례 걸쳐 개정되었고 1998년 제정된 재판소구성법도 2011년에 개정되는 등 위 내용 중 상당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2년 개정시에는, ① 외국인이 당사자인 재판의 경우 북한 민법 적용, 도재판소가 관할, ② 원고가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청구권 포기 불허, ③ 증인에 대한 구인집행기관으로 인민보안기관 특정, ④ 임신중이거나 1살 미만 어린이를 키우는 여성을 상대로 한 이혼사건 각하, ⑤ 재판심리 7일전 검사에게 사건기록 송부 등이 규정되었다.

2007년 개정시에는, ①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참가 규정 신설, ② 인민재판소는 관할지역안의 시(구역)·군급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당사자로 나서는 사건을 관할, ③ 도재판소는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민사사건”과 외국법인,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관할, ④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외국법인,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은 지대안의 재판소가 관할, ⑤ 원고가 2회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여 사건이 기각될 경우 다시 소송제기 불허(종래 가능) 등이 규정되었다.

2009년 개정시에는, ① 사건이 복잡·중대하여 2개월 안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상급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연장 가능 규정 신설, ② 소송당사자가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 재판소 요구에 불응하여 초래된 불이익을 책임진다는 규정 신설, ③ 인민재판소를 “시(구역)·군 인민재판소”로 변경, ④ 복잡·중대한 민사사건인 경우 해당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판정으로 재판준비에 다른 판사를 인입할 수 있고, 인입된 판사는 소송당사자를 만나거나 감정을 맡기거나 참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신설, ⑤ 피고나 제기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그 참가없이 재판심리를 할 수 있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두 번 호출받고도” 부분 삭제) 불출석하는 경우 사건을 기각하며 이 경우 다시 소송제기 가능, ⑥ 상소, 항의할 수 있는 자에 소송당사자, 검사 외에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를 추가하였다.

3. 2016년 북한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2016년 개정시에는 내용과 형식 모두에 변화가 많았다.⁹⁾ 형식에서는 먼저, ① 각 장

8) 2002년, 2007년, 2009년 개정 내용은 법무부, 『통일법무기본자료(북한법제)』, 법무부, 2018, 680~686쪽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마다 세부 절 항목을 신설하고 조문 순서를 변경하였으며(ex. 관할규정: 제53조→제16조), ② 한 조문 안에 3개 항 등으로 구성되었던 내용을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내용에 맞는 표제를 붙임으로써 시각적 이해를 높였다.

[2016년 북한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2절 재판준비
제2장 일반규정	제3절 재판심리
제1절 민사사건의 취급형식	제4절 판결과 판정
제2절 재판관할	제5절 상소, 항의
제3절 소송관계자와 그 배제	제4장 제2심재판
제4절 소송당사자와 제3자, 대리인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
제5절 증거	제1절 비상상소심
제6절 소송기간과 문건 송달	제2절 재심
제7절 소송비용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3장 제1심재판	
제1절 소송의 제기와 접수	

내용의 변화를 차례로 살펴보면, 제2장 제1절 ‘민사사건의 취급형식’에서는, ① 민사사건의 재판권(제7조), 민사재판소의 구성(제8조) 규정과, ② 변론의 보장(“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제13조)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2장 제2절 ‘재판관할’에서는, ① 각급 재판소의 관할로 함께 규정하던 것을 인민재판소(제17조), 도재판소(제18조), 중앙재판소(제19조), 군사재판소(제20조) 관할로 별도 규정, ② 도재판소는 “도급기관, 기업소, 단체”나 외국법인,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관할하고, “필요에 따라” 인민재판소 관할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이송할 수 있고, “도 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은 제2심으로 재판”함을 규정(제18조), ③ 중앙재판소는 “도,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은 제2

9) 이하의 내용은 북한의 2009년 민사소송법과 2016년 민사소송법의 조문을 대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심으로 재판”함을 규정(제19조), ④ 군사재판소관할(제20조), 피고의 임시주소지 재판소관할(제22조),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재판관할(제27조), 상속 관련 사건 재판관할(제28조), 해상청구사건 재판관할(제29조), 해난구조 관련 사건 재판관할(제30조), 관할이 다른 당사자의 재판관할(제31조) 규정 신설, ⑤ 사건의 “이관” 규정을 “이송”으로 명칭 변경, 이송시 “판정” 필요(제33조), ⑥ 상급재판소에 의한 관할지정(제34조), 재판관할에 대한 의견제기(제35조) 규정 신설, ⑦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할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할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

제2장 제3절 ‘소송관계자와 그 배제’에서는, ① 민사소송관계자(제37조), 민사소송담당자(제38조), 민사소송관여자(제39조) 규정 신설, ② 소송관계자 변경신청을 사실심리 시작 이후에도 허용한 예외 삭제(제44조) 등 개정이 있었다.

제2장 제4절 ‘소송당사자와 제3자, 대리인’에서는, ① 소송당사자 인정(“소송당사자능력과 소송대리의 인정은 이 법과 민법 그밖의 해당법규에 따른다.”)(제46조), 다수당사자 소송에서의 당사자선정(제48조), 소송행위능력이 결여된 자의 소송행위(제49조) 규정 신설, ② 소송당사자의 권리로서, 종래 인정된 증거신청 및 변론권 외에도, 청구의 포기 및 범위변경, 화해, 상소, 강제집행 신청, 소송대리인 선임, 재판소성원 등 변경신청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제51조), ③ 소송당사자의 의무(제52조) 규정 신설, ④ 소송제기의 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동소송당사자(제56조), 공동소송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효력(제57조)으로 구분하여 규정, ⑤ 제3자의 소송참가를 독립청구권 여부에 따라 소송행위(제58조)와 소송참가(제59조)로 구분, 제3자의 소송참가신청(제60조), 이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해결”)(제61조) 규정 신설, ⑥ 소송대리와 관련, 위임장의 법적효력(“위임장은 개별적공민인 경우 위임하는 자의 수표가 있어야 효력을 가지며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공인명판과 책임자의 수표가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제65조) 규정 신설, 위임장의 내용(제66조) 구체적으로 명시, 대리권의 증명(제67조), 소송대리권 변경 및 해소된 경우의 통지(제68조) 규정도 신설하였다.

제2장 제5절 ‘증거’에서는, ① 증거의 종류로서, 소송당사자의 말(제70조), 증인의 말(제71조), 증거문서(제75조), 증거물(제77조), 감정결과(제79조), 검증결과(제85조), 시청자료(제86조)의 각 정의규정 신설, ② 증거문서의 제출(제76조), 증거물의 제출(제78조)

규정 신설, ③ 감정의 종류(제80조) 규정 신설, 감정인의 의무(제82조)를 감정인의 권리(제83조)보다 먼저 규정, 감정회피에 대한 책임(제84조) 규정 신설, ④ 재판소의 증거수집을 “판사”의 증거수집(제89조)으로 변경, 판사는 “법이 정한데 따라” 증거를 수집하며 판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 원인으로 자체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나 사건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명시, 판사의 증거수집방법(“판사는 증거를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이거하고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에 기초하여 수집하여야 한다.”)(제90조) 규정 신설, ⑤ 당사자의 증거수집신청과 거부(제91조), 소송관계자의 비밀엄수의무(제92조) 규정 신설, ⑥ 증인의 소환 관련, 증인의 구인 사유(“정당한 이유가 없이 응하지 않거나 사건해결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2가지로 명시, 인민보안기관의 구인판정 집행 관련 의무조항 신설(제95조), ⑦ 증거문서, 증거물의 제시(제96조), 증거의 고착(조서, 사진, 녹음, 녹화)(제97조), 증거물의 고착(조서)(제98조), 증거물 처리(제99조) 규정 신설, ⑧ 판사의 증거보존(제100조), 증거보전 신청시기(제102조), 증거보전 신청서의 내용(제103조), 증거보존 기일통지(제104조) 규정 신설, ⑨ 증거의 검토방법(제106조), 증거의 개별적·종합적 평가(제107조),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평가(“당사자의 주장사실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제108조)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2장 제6절 ‘소송기간과 문건송달’과 관련하여, ① 민사사건 처리기일에 “대외민사 분쟁 관련 사건”은 1년 안으로, “반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 추가(제109조), ② 소송기간의 연장(“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소송기간을 지체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10일내에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신청”)(제111조) 규정 신설, ③ 소송문건의 송달(“소송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접수하였을 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제113조), 직접송달 및 간접송달(제114조),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의 송달(제115조), 우편 및 위탁송달(제116조), 교화인을 상대로 한 송달(제117조) 규정 신설 등 내용상 변화가 많았다.

제2장 제7절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소송비용의 납부(제119조), 소송비용의 부담(“소송비용은 원고의 청구를 승인한 경우 피고에게, 거부한 경우 원고에게 부담”)(제120조) 및 소송비용부담의 고려(제121조)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3장 제1심 재판과 관련하여, 제1절 ‘소송의 제기와 접수’에서는 기존의 “소송장” 명칭을 “소송제기서”로 변경하고 소송제기자(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검사) 규정을 삭제하였다.

제2절 ‘재판준비’에서는 ① 재판준비기간(“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부터 45일”, 판사단 독판정 사건은 “30일”)(제133조) 규정 신설, 재판준비담당자 규정 삭제, 같은 내용의 재판준비판정(“사건을 맡은 판사는 그날로 재판준비판정을 한다.”)(제134조) 규정 신설, ② 소송제기서사본, 답변서의 송달 및 제출기한 변경(제135조), ③ 소송상 권리와 의무의 통고(제137조) 규정 신설, 당사자심문(제138조~제140조) 및 증인심문(제141조~제143조) 규정 신설(기존에는 “소송당사자를 만날 수 있다”, “증거수집과 관련한 증인진술을 받은 경우”라고만 규정하였음), ④ 감정요건(“사건내용을 밝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제144조) 명시, 감정절차(“판정으로”, “감정말김판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제144조~145조) 규정 신설, ⑤ 현장검증에 “소송관계자” 참가 내용 삭제(제148조), ⑥ 재산의 담보처분과 관련하여, 사유(제151조), 시기(사건을 받은 때부터 “판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제152조), 범위(제153조), 절차(제154조~제161조) 등 개별 규정의 신설, ⑦ 사건의 기각사유로서, 원고가 재판준비단계에서 30일이 지나도록 불출석하는 등의 경우 추가(제165조), ⑧ 검사의 민사재판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소송행위에 대한 검사의 참가(제167조), 검사의 의견에 대한 판사의 활동(제168조),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발송(제171조), 검사의 사건기록검토(제172조) 규정 신설, ⑨ 재판준비조서의 작성 규정 삭제, 당사자심문조서(제138조, 제139조), 증인심문조서(제142조, 제143조), 현장검증조서(제149조), 증거문서, 증거물의 고착(제150조), 재산담보처분조서(제158조) 등 개별규정을 신설하였다.

제3절 재판심리와 관련하여, ① 법정 정면장식과 좌석배치, 재판복의 착용(제175조), 재판심리기간(5일, 연장시 5일)(제176조) 규정 신설, ② 판사가 단독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공증을 받은 채무리행” 사유 추가(제177조), 판사 단독판정 절차(판정 10일 전 검사에게 사건기록 송부, 검사의 사건기록검토)(제178조) 규정 신설, ③ 재판심리 과정의 녹음(제182조) 규정 신설, 불출석에 따른 기일연기, 결석재판의 요건 추가(제184조), ④ 재판심리에 당사자의 의무적 참가(제185조), 재판심리에서 당사자의 증거보충(재판준비단계 이후의 증거보충 요건)(제190조) 규정 신설, ⑤ 사실심리 순서의 결정에 “인

민참심원과 합의”하고 “정한 심리순서는 법정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 추가(제193조), ⑥ 소송당사자 심리시, 검사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질문하도록 변경(기존에는 재판장-인민참심원-검사 순서로 질문)(제194조), ⑦ 증인의 재심리(제201조), 소송당사자들의 법정질서준수 의무 규정(제213조)을 신설하였다.

제4절 판결, 판정과 관련하여, ① 판결서, 판정서 등본의 송달(제225조) 규정 신설, ② 재판심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의 예시로 든 “리혼당사자의 가정불화” 삭제(제229조), ③ 소송방해에 대한 제재사유(증거위조·인멸, 증언방해, 재산담보처분 재산은닉·처분, 재판일군 등 직무집행 방해)(제230조) 규정 신설, ④ 판정으로 채택할 대상 규정을 삭제하였다.

제5절 상소, 항의와 관련하여서는, ① 상소, 항의기간의 연장 내용 추가(제235조), ② 상소, 항의할 수 없는 경우(판결·판정의 확정, 중앙재판소 제1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판정,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 명시(제236조), ③ 상소장의 내용(제238조), 상소제기의 통지(제239조) 규정 신설, ④ 항의의 접수 및 취소 절차(제241조)를 보다 자세히 규정하였다.

제4장 제2심 재판과 관련하여, ① 검사에 대한 사건기록 송달(제244조), 검사에 대한 재판날짜 통지(제246조), 검사의 제2심재판 참가(제248조)를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 ② 제2심재판소의 사건기록검토(제245조) 규정 신설, ③ 제2심재판 절차에서 판사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내용과 검사가 소송당사자에게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한 규정 삭제, ④ 재판심리의 종결(제250조), 제2심판정의 채택형식(다수가결)(제251조) 규정 신설, ⑤ 제2심재판소가 직접 판결, 판정을 수정할 때는 “제1심판결, 판정과 반대로 되는 변경은 할수 없다.”는 내용 추가(제253조), ⑥ 제2심재판소가 1심재판소로 사건을 반송하는 경우로 “재판관할을 어긴 경우” 추가(제254조), 재판관할 위반 판결, 판정의 경우 사건의 이송판정(제255조) 규정 신설, ⑦ 재판결과의 통지(제258조), 반송사건에 대한 제1심재판소의 재판심리(제259조)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과 관련하여, ①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제한없음)(제262조) 규정 신설, ② 비상상소제기의 절차 관련 내용 추가(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제출)(제263조), ③ 비

상상소제기의 신청권자로 소송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외에 “재판소, 검찰소” 추가(제265조), ④ 비상상소의 심의범위(“판결, 판정의 합법성, 근거성”)(제270조) 규정 신설, ⑤ 비상상소심 판정의 집행시기(제274조), 비상상소심 결과의 통지(제275조) 규정을 신설하였다. 재심과 관련하여서는, ① 재심의 임무(제276조) 규정 신설, ② 재심제기의 절차 관련 내용 추가(제279조), ③ 재심제기자(중앙재판소 소장, 중앙검찰소 소장)의 권한(사건기록의 요구, 판결·판정의 집행정지, 단 중앙재판소 판결·판정은 집행정지 제외)(제280조) 규정 신설, ④ 재심제기 신청을 받은 재판소, 검찰소의 조사처리 절차 내용(재심제기신청서 작성 등) 추가(제282조), ⑤ 재심사건기록의 송달(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제283조) 규정 신설, ⑥ 재심의 범위(재심사유가 판결·판정 내릴 당시 존재했는지, 새로운 사실이 사건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지 여부)(제286조) 규정 신설, ⑦ 재심 판정의 집행시기(“즉시”)(제289조), 재심 결과의 통지(제290조)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① 집행의 근거(제291조), 집행문 발급의 기초(제292조) 규정 신설, ② 집행문의 종류(민사판결·판정, 형사판결·판정, 중재기관 재결·결정, 사법협정을 맺은 외국재판소의 판결·판정에 근거한 집행문)(제293조) 규정 신설, ③ 집행시효시간(확정시부터 2개월)(제295조) 규정 신설, ④ 집행의 대상(공민의 경우 그의 개별재산 외에도 가정성원들의 개별 또는 가정재산도 집행대상)(제296조), 집행원의 권한(제297조) 규정 신설, ⑤ 집행문 발급의 거부(제301조), 검사에 대한 집행문 송달(제302조), 의무자에 대한 집행통지(제303조) 규정 신설, ⑥ 집행절차(집행문 제시, 2명의 입회인 등)(제305조), 인민보안기관의 집행원 활동보장(제307조) 규정 신설, ⑦ 공민의 사망이나 기관 등 해산의 경우의 집행(제309조), 강제집행 후에도 채무가 남은 경우에 대한 계속상환의무(제310조) 규정 신설, ⑧ 집행이 병합된 경우 집행순위(제311조), 의무자나 재산이 관할 밖에 있는 경우의 집행의뢰(제312조) 규정 신설, ⑨ 대외경제중재기관이 내린 재결의 집행(제313조), 처벌 판정의 집행절차(제314조) 규정 신설, ⑩ 집행중지기간(제316조), 집행조서의 내용(제318조), 집행할 수 없는 재산(1개월분의 식량·생활비, 사회보험보조금 등)(제319조), 검사의 집행 감시(제320조) 규정 신설, ⑪ 집행의 중지사유로 “비상상소, 재심의 제기”를 추가(제315조), 집행의 기각사유로 “자연재해”, “국가적 조치” 등으로 인한 집행불능의 경우를 추가하였다(제321조).

4. 현재 북한 민사소송 제도의 특징

1992년에 정리된 북한 민사소송의 특징을, 2016년까지 개정된 북한 민사소송법의 내용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처분권주의를 배척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포함된 소송제기자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제122조), 재판소가 소송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 법 제16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즉, 사건의 기각사유에 한하고 있는 점(제129조), 또한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소송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소송취소신청을 하면 판사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판정으로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64조), “소송당사자의 권리”로 원고의 청구포기 및 범위변경, 화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 강제집행 신청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제51조) 등을 볼 때,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상소, 항의를 할 수 있는 자에는 소송당사자 외에도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 점(제234조), 비상상소 및 재심의 신청권자에 소송당사자, 이해관계 있는 자 외에 “재판소, 검찰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제265조, 제281조)은 여전하나, 이것은 현재 북한 민사소송에서 검사 또는 검찰소의 광범위한 관여를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배척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변화가 있었다. 즉, 북한 민사소송법은 “변론의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13조). 이와 관련, 소송관계자로 소송담당자와 소송관여자를 구분하고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집행원, 소송당사자, 사건해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소송담당자로 규정하고(제38조), 소송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심리에서 조사심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재판심리에서 자기의 주장사실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과 질문”을 할 수 있음을 소송당사자의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제51조). 또한, 현재 북한의 “판사의 증거수집” 규정을 보면(제89조), “법이 정한데 따라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원인으로 자체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나 사건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요건을 둬으로써, 우리의 직권

증거조사 규정(우리 민사소송법 제292조¹⁰⁾)과 유사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북한 민사소송에는 검사가 여러 형태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음은 여전하나, 2016년까지의 9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재판소 또는 판사와 검사 또는 검찰소 간의 권한 배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헌법 제156조에서 “검찰소는 기관·기업소·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고 규정하고, 북한 민사소송법에서도 이를 이어받아 “검사는 재판과 판결·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공화국의 법이 정확히 지켜지는가를 감시한다.”(1976년 구 민사소송법 제9조)고 규정하였다가 이 규정은 삭제되고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현재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검사의 “감시”가 아닌 “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즉, 검사는 판사, 인민참심원, 소송당사자와 함께 “소송담당자”에 해당하고(제38조), 중요소송행위(제167조), 재판심리(제180조), 제2심재판(제248조), 비상상소사건 심리(제269조), 재심사건 심리(제284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제167조, 제249조, 제271조, 제287조), 재판심리에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으며(제180조, 제248조), 판결, 판정의 채택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제216조, 제231조). 한편, 유일하게 남아있는 검사의 “감시” 규정으로는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 규정이 있다(제320조). 내용을 보면, 검사는 “판결, 판정의 집행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감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집행조서의 검토나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민사소송 절차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와 무관한 일반대중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 민사소송법에서도 여전히 유지되는 특징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제4조),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소의 구성은 재판소구성법에 따른다.”고 하는데(제8조), 북한 재판소구성법에 따르면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

10)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원칙에서 선거”로 선출되고(재판소구성법 제4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이 될 수 있다.”(재판소구성법 제6조). 따라서, 인민대중이 직접 재판소의 구성원이 되거나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판사가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지조사(제147조), 현장검증(제148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나, 현지조사에서는 “증인을 맞대어 놓고 사실사정을 확증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장검증에는 “소송당사자를 참가시킬 수 있으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고 규정하여 요건과 한계를 밝히고 있고 인민대중의 참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과거에는 소송심리 종결 전에 소송심리에 참가한 근로자·농민의 대표에게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1976년 구 민사소송법 제123조), 현재는 위 내용은 삭제되고 소송당사자, 인민참심원, 검사에게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다(제211조).

다섯째, 북한 민사소송은 제1심 관할 분배에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응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201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관할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종래 “각급 재판소의 관할”로 함께 규정하던 것을, 인민재판소(제17조), 도재판소(제18조), 중앙재판소(제19조), 군사재판소(제20조) 관할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따라서 인민재판소와 도재판소의 관할을 원칙적으로 구분하되, 도재판소가 “필요에 따라” 인민재판소 관할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2심 관할에 대해 명시하고(인민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은 도재판소가, 도 및 특별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은 중앙재판소가 2심으로 재판), 군사재판소관할(제20조),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관할(제27조), 해상청구사건 재판관할(제29조) 등 특별재판소 관할 규정을 다수 신설하였다. 또한, 당사자가 재판관할에 대한 의견제기를 할 수 있고(제35조), 인민재판소가 관할 사건을 이송하려 할 때는 “도재판소의 승인” 또는 “중앙재판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등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결국, 북한에서는 상급재판소(도재판소, 중앙재판소)가 하급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이송할 수 있음은 여전하나, 2016년 개정으로 각 재판소 관할을 별도로 규정하고 특별재판소 관할을 다수 신설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III. 북한 형사소송 제도의 특징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북한이 2013년 12월 이례적으로 공개한 장성택(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특별군사재판과 사형판결 및 즉결집행 이후 큰 관심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헌법과 재판소구성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내 논문 등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형사소송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은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채택(제정)하여, 1954년에 1·2차 개정, 1976년에 3차 개정을 하였고¹¹⁾, 다시 199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채택하여, 1995년 1차 개정, 1996년 2차 개정, 1997년 3차 개정, 1999년 4차 개정, 2004년 5차 개정, 2005년 6차 개정, 2006년 7차 개정, 2011년 8차 개정, 2012년에 9·10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2012년 8월 14일에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편, 북한 헌법도 2016년 개정되면서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의 명칭을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변경하였다.

1. 종래 북한의 형사소송 제도

먼저, 국내 문헌(1993)에 소개된 북한 형사소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첫째, 북한 형사소송법은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권리와 이익,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가치와 질서를 모든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북한 형사소송법은 인민들에 대한 사회적 교양, 즉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북한 형사소송법은 사전에 전혀 법원의 견제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기관 등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장주의 등 인권보장제도가 미비하다.

넷째, 북한 형사소송 절차에는 일반대중이 여러 형태로 직접 관여하고 있다. 재판소

11) 북한 형사소송법의 제·개정 경과에 대해서는 법무부, 『통일법무기본자료(북한법제)』, 법무부, 2018, 295~298쪽을 참조하고, 북한이 공개한 2012년 형사소송법에 나온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1992년 이하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12) 이 문단의 내용은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2-형사관계법)』, 법무부, 1993, 573~585쪽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구성에 인민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민참심제와 재판소선거제를 채택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준비절차 및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지료해, 현장검증 등을 통해 인민대중을 소송활동에 참가시키며, 형사소송 심리 자체에 일반대중을 직접 참가시키고 있다.

다섯째, 검사가 형사재판을 감시할 수 있다. 검사는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상급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손해보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점(민·형사절차의 분리 불철저)이 특징적이다.

일곱째, 인민재판소, 도재판소, 중앙재판소 사이에 제1심 관할의 분배에 있어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한편, 최근 문헌(2015)에서는 북한 형사소송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¹³⁾

먼저, 북한 형사소송에서는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 절차가 별도로 존재한다. 예심은 별도의 예심기관이 피심자를 조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절차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수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재판은 3급 2심제를 원칙으로 하며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셋째, 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예심단계에서 장기간 구금을 허용한다. 넷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예심 초기 단계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무죄추정의 원칙, 전문증거 배제법칙이 채택되어 있지 않다.

2. 북한 형사소송 제도의 변화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1950년 제정된 이래 1954년부터 2012년까지 13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1998년 제정된 재판소구성법도 2011년에 개정되는 등 위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3) 송인호, 앞의 책, 146~147쪽을 정리하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¹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54년 개정시에는, ① 공산주의체제 강화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행의 무기로써 재판 및 검찰기관 기능의 강화, ② 기소법정주의, ③ 피해자에 의한 사소(私訴) 제도 인정이 있었다.

1976년 개정시에는, ① 판사의 재판에 대한 독립규정 삭제, ② 중앙재판소의 최고인민회의 등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이 있었다.

1992년 개정(북한이 공개한 형사소송법에는 1992년에 ‘채택’(제정)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시에는, ① 종래 총 25장 281개 조항이었던 것을 총 10장 305개 조항의 체계로 변경하고 전근대적 규정 다수 삭제, ② 국가소추주의, 기소편의주의, ③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 규정을 신설하였다.

1999년 개정시에는, ① 손해보상기관으로 예심원을 추가, ②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일반규정, 제3장 증거, 제4장 수사과 예심, 제5장 기소, 제6장 변호, 제7장 재판, 제8장 제2심 재판, 제9장 비상상소와 재심, 제10장 판결·판정의 집행으로 구성을 갖췄다.

2004년 개정시에는, 총 12장 439개 조항으로 전면 개정이 있었다. ① 각 조문마다 제목을 붙이고 장·절로 구분하여 체계화, ② 형사소송법의 사명을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서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 것으로 수정(제1조), ③ 증거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검사 제외(제93조), ④ 증거물을 찾아낸 경우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규정(제100조), ⑤ 강압에 의한 진술강요의 금지와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를 피심자는 물론 피소자에 대하여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제98조), ⑥ 변호인 선정시기를 사실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로 제한(제110조), ⑦ 변호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를 변호인으로

14) 이하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은 법무부, 『통일법무기본자료(북한법제)』, 2018, 295~313쪽과 북한의 2006년 및 2012년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112조), ⑧ 수사·예심관할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은 안전보위기관, 일반범죄사건은 인민보안기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은 검찰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제122조, 제124조), ⑨ 수사원·예심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예심감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제147조, 제156조), ⑩ 예심기간의 2차 연장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예심기간을 총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제152조, 제188조), ⑪ 체포·구류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무기노동교화형,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가능하며 노동단련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제179조), ⑫ 예심원이 체포영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어 승인받도록 하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승인하며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제한(제180조, 제181조), ⑬ 재판소의 독자성 보장 규정 신설(제272조), ⑭ 피소자에 대한 재판을 위한 구류기간을 25일까지, 노동단련형의 경우 15일까지 각각 제한(제282조), 재판정에서는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도록 제한(제283조), ⑮ 제1심 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으로 재판심리를 끝내도록 하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차 10일, 2차 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제287조), ⑯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제288조), ⑰ 기소추가·변경의 가능시기 규정(제334조, 제337조), ⑱ 노동교화형 등 자유형에 있어서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하며,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형기계산의 기준을 명시(제425조)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2012년 개정에서는, ①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원칙에 ‘전면성’ 개념 추가(제5조), ② 형사소송관여자 개념 신설(제9조), ③ 증거물, 증거문서 정의규정 삭제, ④ 관할설정기준(“법기관의 사명과 임무, 범죄발생지, 사건의 경중”) 신설(제45조), ⑤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가 기소되었을 경우 “판사”가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도록 규정(제63조), ⑥ 변호인 선정시기는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로 규정(제62조), ⑦ 수사의 임무에서 “예심에 넘기는” 부분 삭제(“범죄자를 적발하는 것”)(제133조), ⑧ 최대 연장 예심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로 증가된 반면, 노동단련형의 경우는 1개월에

서 5일로 축소(제151조), ⑨ 피심자 심문시 형사책임추궁인정여부를 먼저 묻도록 하고(제170조), 기록수가 참가하도록 규정(제171조), ⑩ 형사책임추궁결정 전이라도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구류구속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제177조), ⑪ 예심을 위한 구류기간 연장시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은 1개월에서 5일로 변경(제187조), ⑫ 기소를 위한 구류기간(원칙 10일)에 있어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은 5일간 연장가능, 로동단련형의 구류기간은 3일에서 5일로 증가(제262조), ⑬ 제1심재판을 위한 구류기간(25일)에 있어 로동단련형의 구류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제281조), ⑭ 제1심 재판기간(원칙 25일)에 있어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 연장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증가(제286조), ⑮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의 재판관계자에서 재판소,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제318조), ⑯ 변론의 내용에서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과 목적, 위험성 정도”를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의 요구에 맞게 재판이 진행된 정형과 피소자의 법적권리정형, 기소된 범죄사실과 적용된 기소법조인정, 범죄의 원인과 찾아야 할 교훈”을 새롭게 추가(제326조), ⑰ 비상상소심에서도 기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제335조), ⑱ 제2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판정서를 읽을 때 변호인의 참가 규정(제373조), ⑲ 사형 집행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 대신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제418조)하였다.

3. 현재 북한 형사소송 제도의 특징

1993년 문헌에서 정리된 북한 형사소송의 특징을, 2012년까지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형사소송법이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권리와 이익,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가치와 질서를 모든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2004년 개정시 제1조 형사소송법의 사명에서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 하는데 이바지”한다고만 규정하고, 제2조는 종래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것이었다가 현재는 “계급로선의 관

철원칙”이라는 제명 아래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한다고만 할 뿐 특정 계급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제4조(구법의 제5조)는 종래 “국가는 공민들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범죄를 미리 막는다.”고 하였다가 현재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부분을 삭제하였고, 제5조에서 “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며 제6조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계급 및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는 북한 형사소송법의 보호적 성격은 현재 북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 형사소송법이 인민들에 대한 사회적 교양, 즉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유효한 특징이라 생각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조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적극 의거”하고 제4조는 “공민들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33조는 “증거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할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 형사소송법은 일반 공민들도 형사소송 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교양적 기능을 달성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 형사소송법은 사전에 전혀 법원의 견제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기관 등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장주의 등 인권보장제도가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은 2012년 개정시 제179조에서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강제처분에 있어 영장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였는데, 제180조를 보면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는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고, 제216조는 “수색과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강제처분에 검사의 승인만 있으면 될 뿐 여전히 법원의 견제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에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장주의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넷째, 북한 형사소송 절차에는 일반대중이 여러 형태로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일응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적극 의거”(제3조)하고 “증거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제33조)함을 밝히고 있고, 북한 헌법 및 재판소구성법에 따를 때 공민이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며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구법에서는 “필요에 따라”라고 규정하였으나 삭제)(제285조)는 이른바 ‘현지료해’ 규정과, “재판소는 범죄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제320조)는 일반대중이 참여하는 ‘현장검증’ 규정도 여전히 두고 있다. 그리고 사실심리를 종결할 때에도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제323조)하고,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말을 하게 할 수”(제324조) 있는 등 재판심리에도 일반대중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삭제된 것과 대조되는 대목으로, 북한의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여전히 인민재판적 성격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검사가 형사재판을 감시할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는 수사원, 예심원과 함께 형사소송 담당자이고(제9조) 기소의 담당자이다(제12조).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를 하며(제14조), “위법한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고(제146조), 역시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제155조), 무엇보다 검사는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하고(제277조)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제287조),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검사는 상급재판소에 항의”할 수도 있다(제296조).

여섯째, 북한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손해보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점(민·형사절차의 분리 불철저)이 특이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우리도 이제는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형사배상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기에 이 점은 남북한 형사소송 절차의 공통된 특징이 되었다. 차이가 있다면,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손해보상청구를 형사재판심리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민사재판으로 청구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제130조). 반면, 우리는 형사배상명령 청구를 각하할 수는 있어도 기각은 없고, 각하한 경우에도 민사로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일급제, 인민재판소, 도재판소, 중앙재판소 사이에 제1심 관할의 분배에 있어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고(제51조), 최고재판소도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제53조). 이 점은 민사소송의 관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있다면 민사소송법은 인민재판소, 도재판소의 관할을 원칙적으로 구분하고(민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필요에 따라” 도재판소가 인민재판소의 관할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이송할 수 있게 한 것에 비해(민사소송법 제18조), 형사소송법은 인민재판소의 관할을 “도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제50조)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어쨌든 북한은 3급 2심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최고재판소¹⁵⁾가 제1심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경우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장성택에 대한 형사재판 및 사형 집행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최근 문헌(2015)에서 소개한 북한 형사소송의 특징 중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해당기관의 승인”으로 변경(제418조)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해당기관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는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이 필요했던 사형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예심 초기 단계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와 관련해,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2

15) 2016년 헌법 개정시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변경되었는데 아직 형사소송법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위 내용이 반영된 것을 볼 때, 형사소송법도 2016년경에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국내에 입수되지는 않았다.

년 형사소송법은 피소자 외 “피심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고(제58조) 피심자도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 다만, 변호인 선정시기와 관련하여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제62조) 예심원이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결정”을 하므로(제157조), 실질적 수사인 예심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규정상으로도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면서 비로소 피심자에게 변호인선정권리를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58조). 따라서 수사·예심의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위 평가는 여전히 타당하다.

나아가, 북한 형사소송은 무죄추정의 원칙, 전문증거 배제법칙이 채택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정 당시에는 증거능력 제한 및 자백의 증명력 제한규정을 전혀 두지 않았다. 그 후 1992년 개정시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전문증거 배제법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IV. 결어

본 논문은 종래 국내 문헌에서 소개된 북한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제도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후 9차에 걸친 북한 민사소송법 개정 및 10차에 걸친 북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북한 헌법, 재판소구성법 등의 변천내용을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변화된 현재 북한의 소송제도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북한 민사소송의 경우, 현재는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해왔고,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민사소송에 검사가 관여하는 것은 여전히 특징이나 이제는 감시가 아닌 ‘참가’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일반대중의 경우 직접 재판소의 구성원이 되거나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현지조사, 현장검증에 있어서의 참여 및 소송심리에 있어서의 의견진술의 기회는 갖지 못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 민사소송에 있어 인민재판적 성

격은 거의 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의 관할에 있어 상급재판소(도재판소, 중앙재판소)가 하급재판소 계속중인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이송할 수 있음은 여전히나, 2016년 개정으로 각 재판소 관할을 별도로 규정하고 특별재판소 관할을 다수 신설하였다.

북한 형사소송의 경우, 현재는 프롤레타리아계급 및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는 북한 형사소송법의 보호적 성격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여전히 인민들이 현지료해, 현장검증, 재판심리 등 형사소송 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교양적 기능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여전히 인민재판적 성격이 많이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개정을 통해 강제처분에 영장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권한이 검사에게 있고 법원의 견제는 받을 수 없어서 진정한 의미의 영장주의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형사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고 특히 최고재판소가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성택 재판의 경우처럼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은 1992년 개정으로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전문증거 배제법칙은 여전히 채택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민사소송 제도에 있어서는 종래 지적된 인민재판적 성격이 거의 사라지고 당사자처분권과 변론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해온 반면,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민재판적 요소가 상당수 남아 있고, 진정한 영장주의 제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사형까지 집행될 수 있는 관할 제도 등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소송제도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 : 2019. 5. 3. 심사개시 : 2019. 5. 8. 게재확정 : 2019. 5. 16.)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1-민사관계법)』, 법무부, 1992.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법원행정처, 2010.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2-형사관계법)』, 법무부, 1993.

법무부, 『통일법무기본자료(북한법제)』, 법무부, 2018.

장명봉 편,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8.

송인호, 『통일법강의』, 법률출판사, 2015.

법원행정처, 『북한 사법제도 개관』, 법원행정처, 1996. (송인호 재인용)

2. 외국문헌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편집』, 법률출판사: 북경, 2016.

Abstract

Changes in Civil and Criminal Lawsuits in North Korea

Lee Eun-Yeong

This paper introduce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vil lawsuits and criminal lawsuits of North Korea introduced in the domestic literature, a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9th Civil Procedure Act and the 10th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nstitutional laws and the Courts Constitution Act of North Korea,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d lawsuit system in North Korea.

In the case of civil lawsuits in North Korea, it has now been changed to recogniz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arties, and guarantees the right of remand of the parties. The involvement of prosecutors in the civil lawsuits in North Korea is still a feature, but now it is defined as 'participation', not surveillance. In addition, the general public, who is not a party, can be a member of the court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election to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but now has the opportunity to express opinions in the field investigation, can not do it. In this regar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eople's judicial character in the civil lawsuits in North Korea has almost disappeared. In addition, in the jurisdiction of civil lawsuits, the higher courts are able to directly judge or transfer cases in progress in the lower courts, but with the revision in 2016, a number of which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riminal lawsuits, the protective nature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currently protects the proletarian class and socialist system, seems to have eased considerably. Unlike civil lawsuits, criminal lawsuits of North Korea are still trying to achieve a educational function for the people by encouraging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such as local investigation, on-the-spot verification, and trial hearing.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North Korean criminal lawsuits are still more popular than civil lawsuits. In addition, the revision in 2012 introduced a warrant sys-

tem for forced dispositions, but inspectors have its authority and can not be checked by courts, so it can not be said that true warrantism has been introduced. In addition, the jurisdiction of the criminal lawsuit is different from the civil litigation, and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Supreme Court is allowed to judge the first trial directly, so that the defendant can be punished by only one trial. In addition, North Korea's criminal lawsuits came to be amended in 1992 to restrict the confidentiality of confession evidence, but the principle of innocence and the rule of exclusion of hearsay evidence are still not adopted.

In conclusion, the civil lawsuit system in North Korea has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point of view of the people's trial to the disappearance of the peopl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arties and the right of remuneration. However, despite significant chang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 still remains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s judicial elements, and does not introduce a genuine warrant system and the principle of innocence estimation, and most of all, it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in terms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such as the jurisdiction system that can be executed by only one trial. Nevertheless, the lawsuit system in North Korea is constantly changing, an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Key words

Justice System and the Lawsuit system in North Korea, Criminal procedure, Civil litigation system